

일반논문

대전지역 사회운동의 성장과 분화 :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김도균(한일장신대)

대전지역 사회운동의 성장과 분화과정은 한국 사회운동의 일반적 궤적과 유사한 경로를 보였다. 87년 이전부터 종교·학생·교육·문화·청년운동 등 여러 사회운동세력이 존재했지만, 반독재민주화운동이라는 거대한 운동으로 수렴되어 있었다. 개별 운동세력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오히려 각 부문운동을 통해 반독재민주화운동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서야 대전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1차 분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지속해서 2차 분화가 진행되면서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지역사회운동의 지형도가 재구조화 되었다. 지역사회운동의 성장과 분화에 있어 90년대에 도입되고 확대된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정치체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지역정부와 지역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정치구도는 지역사회운동의 생성과 확장을 자극하였다. 90년대 들어 새롭게 생성된 정치경제개혁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 새롭게 부상한 대안사회운동 및 풀뿌리운동들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를 진보적·민주적·합리적·호혜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지역사회운동의 능동적 자기 전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사회운동, 시민운동, 민주화운동, 사회운동의 분화, 지방자치.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3A2044295).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라는 표현은 조희연(2010)이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 다양한 사회운동들로 성장하고 분화해 온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적 궤적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1. 서론

87년 민주화이후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장과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에 따른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현, 97년 IMF외환위기와 연이은 수평적 정권교체, 그리고 IMF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해온 신자유주의 시장화 경향은 한국 사회운동의 지형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사회운동이 사회모순과 갈등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운동은 앞서 언급한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응하거나 대응하면서 새롭게 생성, 분화하고 변형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충청지역의 대표 거점도시 '대전(大田)'을 중심으로, 어떻게 지역사회운동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장하고 분화해왔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지역사회운동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학술적 연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사회운동을 연구하는 지역연구자의 부족을 들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 특유의 중앙(서울) 중심적 사유방식 또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운동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는 본 연구는 한국 사회운동의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국 사회운동의 성장과 분화, 그리고 그 원인을 거시적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조희연 2010; 김정훈 2010a; 2010b 정태석 2009; 2015). 이러한 연구는 한국 사회운동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압축적 사회변동을 경험한 아시아 사회운동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운동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연구자에 따라 설명 방식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핵심 논리는 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하여 반독재민주화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운동'(big movement)

에서 다양한 사회운동들인 ‘차이의 운동들’(movement in difference)로 한국 사회운동의 지형도가 재구조화 되어왔다는 것이다(조희연 2010; 김정훈 2010a; 2010b; 정태석 2009; 2015). 즉 87년 민주화이전, 민주화는 한국 사회운동의 가장 우선적인 해결과제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다양한 사회적 적대 혹은 갈등이 ‘독재 대 민주’라는 단일 전선으로 응축될 수밖에 없었으며, 우선 과제였던 민주화 이후에야 부문운동이 그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정태석 2015). 이후 민주화의 진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위험사회, 소비사회, 서비스사회, 개인화된 사회 등 한국 사회의 복합적 사회변동에 대한 적응 및 대응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운동이 지속적으로 재구조화되어왔다(조희연 2010; 김정훈 2010a; 2010b; 정태석 2009; 2015).

이상의 연구들은 서구 사회운동과 구별되는 한국 사회운동의 성장 및 분화의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풍부한 이론적 지침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거시적 수준에서 한국 사회운동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규범적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구조라는 거시적 외부변수에 집중한 나머지 사회운동세력들의 능동적인 자기 선택의 과정을 잘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즉 거시적인 구조적 긴장만으로 사회운동의 촉발과 성장과정을 설명할 수 없으며, 운동집단을 둘러싼 미시적 구조와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동원의 가능성 또한 주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사회운동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보면 지역사회운동세력들은 지방자치라는 지역정치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자원동원의 가능성이 높을 때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의 재구성을 추구하였다(김도균·이평주, 2015; 김도균, 2016). 따라서 한국 사회운동의 성장과 분화과정을 설명하는 선행연구들이 현실 적합성 높은 이론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보완·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대전지역 사회운동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들의 공백을 메워보고자 한다.

2. 한국 사회운동의 성장과 분화에 관한 논의

87년 민주화 이후 새롭게 부상한 시민운동을 설명하려는 이론적 자원으로 서구의 신사회운동론(New-Social Movement)이 적극 도입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냉전반공체제로 인해 구사회운동(Old-Social Movement)인 노동운동 또한 87년 민주화 이후에서야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었고, 민주화 이후 새롭게 등장한 한국의 시민운동 또한 온건한 개혁운동이었다는 측면에서 급진적 운동방식을 통한 풀뿌리운동을 의미했던 서구의 신사회운동과는 근본적 차이를 보였다(정태석 2008; 2015). 즉 87년 이후 한국 사회운동의 분화는 서구의 오래된 운동과 새로운 운동의 분화라기보다는 급진적 민중운동과 온건한 시민운동의 분화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정태석, 2008; 김정훈, 2010a; 조희연, 2010). 이는 서구의 신사회운동론을 통해 한국 사회운동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일정부분 한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국내 학자들은 서구의 신사회운동론을 수용하면서도 서구와 구별되는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 사회운동의 분화과정에 관한 거시적이며 종합적인 논의는 조희연(2010)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는 한국 사회운동은 ‘1차 분화’와 ‘2차 분화’라는 복합적 분화과정을 통해 반독재민주화운동이라는 거대한 운동에서 다양한 사회운동들에 기반을 둔 차이의 운동들로 사회운동의 지형도가 재구조화되었다고 보았다(조희연 2010, 10; 김정훈 2010b, 451). 그리고 이러한 사회운동의 분화는 정치적 측면에서 ‘수동

혁명적 민주화 1단계'와 '수동혁명적 민주화 2단계', 경제적 측면에서는 '포스트-개발자본주의화'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즉 정치구조와 경제구조라는 거시적 사회구조의 변동을 두 축으로 하여 한국 사회운동의 분화과정을 설명하려 했다.

조희연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과 위로부터의 개혁이 결합한 수동혁명적 민주화 과정으로 보고, 민주화 단계를 구(舊)독재 세력이 주도한 수동혁명적 민주화 1단계(1987~1997년)와 반독재세력의 일부가 집권한 수동혁명적 민주화 2단계(1998~2007년)로 구분하였다. 민주화 1단계는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독립이라는 '자율화'를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면, 민주화 2단계는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 변화로 시민사회의 요구와 이해가 국가정책 과정에 반영되는, 즉 제도적 통로가 확장되는 '제도화'를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조희연은 민주화 1단계의 자율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사회운동의 분화를 1차 분화, 민주화 2단계인 제도화에 대응하면서 나타난 사회운동의 분화를 2차 분화로 규정하였다(조희연 2010, 61).

우선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자율화는 급진적인 '체제도전적 사회운동'과 상대적으로 온건한 '체제개혁적 사회운동'의 분화를 가져왔다. 독재체제하에서 반체제운동의 급진적 분파였던 소위 민중운동(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은 정치적 기회구조가 확장됨에 따라 비합법적·불법적 운동에서 반(半)합법적·합법적인 체제도전적 사회운동으로 변형되었는데, 그 대표 사례로 노동운동의 성장을 들 수 있다(조희연, 2010, 68-69). 반면에 저항적 자유주의적 운동흐름은 자율화가 확장됨에 따라 체제개혁적 사회운동이라고 불리는 정치경제개혁 시민운동으로 계승되었다는 것이다(조희연, 2010, 65-67). 87년 민주화 운동은 대통령 직선제 쟁취라는 최소 정의

적 민주주의를 운동 목표로 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의 극렬한 저항 없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오랜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형성된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의 불합리성은 해소할 수는 없었다(박찬표 2013, 149; 조대엽 2007). 따라서 87년 이후 체제개혁적 사회운동은 권위주의 질서 속에서 형성된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의 불리합성에 저항하는 정치경제개혁 시민운동이었다. 89년 기존의 민주화 운동 및 민중운동 담론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등장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94년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하면서 등장한 참여연대운동 등이 이러한 운동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다른 한편에서는 독재체제하에서 독자적 정체성 자체를 억압받았던 다양한 소수자운동들이 새롭게 생성되고 강화되었다. 반독재민주화이라는 거대한 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획득하고, 그로 인한 자율화의 확대는 성·인종·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았던 소수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맞선 대항하는 소수자운동을 가능하게 했다(조희연 2010, 73-74). 소수자 집단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독자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기존의 주류 집단(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 등)의 독점적인 경제·사회·문화적 지위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87년 이후 가장 활성화 된 소수자운동의 대표 사례로 여성운동을 들 수 있다. 여성운동은 민중운동 또는 민주화 운동의 하위 파트너에서 벗어나 여성주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독자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수동혁명적 민주화 2단계는 반독재세력에 의해 추진되었다. 따라서 자율화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변화로 사회운동의 요구가 제도정치영역으로 수용되는 제도화 수준 또한 높아졌다. 그러나 제도화가 지닌 이중의 성격으로 인해 사회운동의 분화를 촉진

시켰다. 제도화는 사회운동이 자신들의 요구를 실효성 있는 법과 정책의 형태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확보하는 것인 동시에 사회운동의 인물과 의제가 지배체제로 흡수되어 기존 지배를 재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조희연 2010, 81-82). 후자의 입장은 사회운동의 제도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메이어와 태로우(Meyer and Tarrow 1998)가 사용한 포섭(co-optation)의 개념과도 유사하다.¹⁾ 따라서 제도화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조희연(2010, 82)은 제도화에 대한 사회운동의 응전 유형을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적극적 제도화 전략), 반대로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입장’(반제도화 전략),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하면서 상황에 따라 ‘수용과 거부를 병행하는 입장’(병행전략)으로 나누었다. 즉 민주화 2단계에서 한 단계 높아진 자율화와 제도화는 한국 사회운동의 분화와 변형을 더욱 촉진하였다.

수동혁명적 민주화가 사회운동에 대한 정치적 측면의 도전이었다면 경제적 측면의 도전은 ‘포스트-개발자본주의화’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였다. 포스트-개발자본주의화는 초기 개발단계와는 다른 욕망과 감수성을 지닌 대중을 출현시켰다. 그리고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흐름(노동시장의 유연화, 외국자본의 유입, 탈규제, 작은 정부, 시장주의 확대 등)이 강력하게 한국 자본주의의 원리로 내부화되었다(조희연 2010, 54-58). 조희연(2010, 58)에 따르면, 한국은 특수하게도 수동혁명적 민주화 1단계는 포스트-개발자본주의화, 수동혁명적 민주화 2단계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시기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1997년 IMF외환위기는 구독재세력에서 반

1) 포섭은 사회운동세력이 기존의 정치적 관행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주장과 전술을 수정하여 기존 지배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Meyer and Tarrow 1998; 김도균 2015).

독재세력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 어주었지만, 이후 반독재민주정부에 의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본격적으로 내부화되는 역설적 상황 또한 만들어 냈다.

수동혁명적 민주화 1단계에 대한 대응으로 정치경제개혁운동 및 소수자운동이 출현했다면, 포스트-개발주자본주의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생활세계 개혁적 운동’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생활세계 개혁운동은 개발 이후 ‘새로운 풍요’와 ‘풍요의 모순’을 주요한 운동이슈로 한다는 점에서 탈물질주의 가치(post-materialism value)를 내포한다(조희연 2010: 92). 이 시기 환경 및 먹을거리, 소비자 문제 등 다양한 생활상의 의제가 사회운동으로 전환되었다. 또 다른 경제 변수인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단계에서는 생활세계 개혁적 운동이 더욱 다양화되는 동시에 보다 급진적인 ‘대안생활세계운동’이 출현하였다(조희연 2010, 98). 대안생활세계운동은 생활세계 개혁적 운동이 급진화한 형태로, 기존의 지배체제로부터 탈주하여 대안적 삶의 양식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체제 이탈적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생명사상, 생태공동체주의, 영성, 무소유의 사상, 생태주의, 공동체주의 등 다양한 대안적 가치와 사상에 기반을 두고 전개되는 귀농운동과 생태공동체운동을 그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조희연 2010, 98). 또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비정규직 확대 및 소득양극화와 같은 경제적 모순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응전으로 정규직 노동자운동과 구분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을 새롭게 등장시킨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확대로 인종적 위계를 쟁점으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운동과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 반세계화운동 또한 새롭게 형성되었다(조희연 2010, 102-105).

조희연의 종합적 논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김정훈(2008)과 정태석(2009; 2015)도 한국 사회운동의 분화과정을 설명하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 또한 독재 대 반독재(혹은 민주)라는 단일 전선에서 87년

이후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으로 분화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분화되어 왔다는 기본 논리는 조희연과 유사하다. 그리고 87년 이후부터 90년대를 1차 분화, 2000년대를 2차 분화가 진행된 시기로 보는 것 또한 대체로 일치한다.

조희연이 주로 거시적 정치경제구조와 사회운동 사이의 조응관계를 통해 운동의 분화과정을 설명했다면, 김정훈(2010: 461)은 사회운동 내부의 핵심적인 인적 자원의 변화가 사회운동의 분화를 촉진시킨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1차 분화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으로 분화되었지만, 양 쪽의 핵심 세력은 8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동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형성된 강한 인적 연결망과 사회개혁에 대한 공동의 신념은 연대활동을 강화하는 무형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되었다(김정훈 2010, 457).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운동의 핵심 세력이 80년대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세대에서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전환하면서, 인적 연결망과 공동의 신념이 약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결과, 핵심 세력이 자신들의 운동영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시민운동의 2차 분화를 촉진시켰다는 것이다(김정훈 2010, 461). 김정훈은 또한 2차 분화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운동들 중에서 ‘풀뿌리운동’을 주목해서 강조하고 있다. 풀뿌리운동은 전문 활동가 및 이슈, 미디어 중심적 시민운동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따라서 풀뿌리운동은 시민 혹은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주체형성’을 강조한다(김정훈 2010, 223). 즉 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풀뿌리운동의 실천 과정인 동시에 풀뿌리운동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하승우 2006, 106; 김정훈 2010, 223). 따라서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동육아, 방과 후 학교, 생활협동조합,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가 사회운동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운동의 다양성 증대로 이어졌다.

정태석(2015)은 사회운동을 운동의 지향점에 따라 ‘외부(체제)지향적 사회운동’과 ‘내부(시민사회)지향적 사회운동’으로 구분하였다. 외부지향적 사회운동이 자신들의 삶을 억압하는 외부 권력이나 사회체계에 대한 도전이라면, 내부지향적 사회운동은 시민사회 내적인 생활관계의 성숙과 민주적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이다.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원화되면서 외부 체제에 대한 개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민사회 내부의 일상적 관계의 민주적·합리적 재구성을 지향하는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지향적 사회운동은 지역먹거리운동, 생활공동체운동, 협동조합운동, 사회적경제 또는 공유경제 운동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면서 한국 사회운동의 분화를 촉진시켰다는 것이다. 내부지향적 사회운동은 앞서 언급한 생활세계 개혁적 운동, 대안생활세계운동, 풀뿌리운동 등과 중첩된다. 정태석 또한 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하여 반독재민주화운동이라는 거대한 운동에서 다층적이고 복합적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분화되어왔다는 조희연의 기본 논리를 공유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운동의 분화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거시적 사회구조의 변화가 사회운동에 미친 영향, 그리고 분화된 다양한 운동의 유형들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거시적 사회구조의 변화와 거시적 사회운동의 분화과정 사이의 조응관계에 집중한 나머지 추상적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먼저 선행연구들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을 중앙정치(정부)권력의 변화로만 환원하여, 87년 이후 중요한 정치적 변화 중의 하나인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확대가 사회운동에 미친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역차원의 사회운동과

관련해서 지방자치제는 핵심적인 정치적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운동 간의 관계에 주목한 김도균(2015)의 연구에 따르면, 90년대 부활한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라는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들어냈다. 지방자치의 실현은 민주화의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에 지방정부 또한 과거처럼 시민사회를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 없었다. 오히려 지방정부는 통치의 정당성과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를 필요로 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운동의 목표와 활동방식이 온건한 운동세력이라면 정치적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일부 허용하였다. 지역사회운동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지방자치는 영향력의 정치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다. 다양한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지역정치와 행정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대되었다. 즉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운동세력들에게 사회운동의 정치적 효능감을 크게 높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이 아닌 제도권 내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또한 조희연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운동세력들의 능동적인 자기선택 과정을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사회운동은 구조적 변화에 대한 즉자적인 대응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사회운동세력은 동원할 수 있는 운동자원 혹은 역량에 따라 운동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운동은 사회운동세력 혹은 조직이 주체가 되어 일정한 환경(구조)에서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조직화하여 영향력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상필, 2014). 즉 경제사회학적 자원동원에 입각한 매카시와 즐드(McCarthy and Zald, 1977)의 주장처럼 사회운동의 출현과 전개과정은 자원동원의 가능성 여부와 정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의 성장과 분화 과정은 운동의 역량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자원동원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시적 수준의 선행연구들은 구조와 운동사이의 대응관계에 집중한 자원동원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도식적 설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조희연은 급진적 민중운동세력이 체제도전적 운동으로, 저항적 자유주의세력이 체제개혁적 운동으로 계승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 증거 없는 다소 규범적 주장이다. 김정훈이 운동의 핵심 인적 자원의 변화가 사회운동의 분화를 촉진시킨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새로운 운동의 출현과 전개에 필요한 운동자원은 소수의 핵심 운동가의 개인적 헌신과 운동가들 사이의 협소한 연결망으로 해결 수 없다. 오히려 외부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약한 연대의 힘(the strength of weak tie)이 자원 획득에는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Granovetter, 1974). 따라서 핵심 운동가뿐만 아니라 운동에 참여한 집단의 다양성을 함께 주목해서 봐야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면서도 이들이 간관했던 지방자치, 운동세력의 자원동원역량이라는 새로운 변수 도입하여, 대전지역사회운동의 성장과 분화과정을 설명해보려고 한다. 연구대상의 지역적 범위를 대전지역으로 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벌어진 모든 사회운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87년 6월 항쟁을 전후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 시기는 대전지역에서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운동이 새롭게 등장하고 활성화되었던 시점으로, 이때 현재와 같은 지역사회운동의 지형도가 형성되었다. 반독재민주화운동은 87년 6월 항쟁을 중심으로, 90년대 시민운동

운동은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 소속된 주요 단체들의 창립과정과 활동에 놓고 분석하였다.²⁾ 그리고 조직 특성상 연대회의의 가입단체와 구분되는 협동조합운동, 풀뿌리운동 등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에서 인지도 높은 단체 및 활동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시민운동과 함께 1차 분화의 주요한 한 축인 노동운동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노동운동의 형성 및 조직화 과정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기 때문이다(박노영 외, 2011). 따라서 지역노동의 관한 부분은 이 연구로 대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문헌자료와 심층면접을 통해 확보하였다. 1990년 이전 지역사회운동과 관련된 1차 문헌으로는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2005)를 정리한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단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보고서』를 주로 참고하였다. 위 문헌에는 80년대 전개된 지역사회운동 관련 신문기사 및 성명서 등이 수록되어 있어, 당시 진행된 운동의 기초적 사실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전개된 시민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2015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지역사회운동사』1권과 2권(박노영 외, 2015)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보고서 1권은 1960년 4·19민주화운동, 70년대 반유신운동, 87년 6월 항쟁과 80년대 노동운동을 기술하고 있으며, 2권은 90년대부터 전개되어온 대전지역의 다양한 시민운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의 여성운동, 환경운동, 협동조합운동 부분은 보고서 2권에 수록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기술하고 분석

2) 현재 연대회의는 15개의 다양한 지역시민운동단체들이 가입해있는데 활동의 공익성, 운영의 자율성 등에 있어 대전지역 시민운동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는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 사람들, 대전여민회, 대전충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민회,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환경운동연합, 전국주부교실대전광역시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하였다.

본 연구는 1차 문헌과 2차 문헌을 폭넓게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운동에 오랜 동안 참여해 왔던 8명의 전·현직 활동가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내부 논쟁과 운동의 동원구조를 관한 질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50대 면접은 주로 80년대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의 초기형성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40대 면접은 2000년대 들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풀뿌리운동 및 협동조합운동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역사회운동의 협소한 인적 자원의 특성상 이들은 상황에 따라 여러 운동영역에 참여해왔다. 따라서 다양한 운동영역에 관한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은 2015년 6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되었다(<표. 1> 참조).

〈표. 1〉 심층면접대상자

가명	면접일시	운동영역	가명	면접일시	운동영역
가(남, 40대)	2015년 6월	민주화운동	마(남, 40대)	2015년 11월	정치개혁시민운동, 풀뿌리운동
나(남, 50대)	2015년 7월	민주화운동	바(남, 40대)	2015년 12월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다(남, 50대)	2015년 7월	민주화운동	사(여, 50대)	2015년 12월	여성, 풀뿌리운동
라(남, 50대)	2015년 11월	정치경제개혁 시민운동, 환경운동	이(남, 50대)	2015년 7월	사회적경제

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으로 가나다 순으로, 나이는 연령대만을 표기함

4. 거대한 운동: 6월 항쟁을 중심으로

87년 6월 항쟁이전부터 대전지역 사회운동은 크게 종교, 학생운동,

청년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교사 중심의 교육운동, 문화운동, 여성운동 등 여러 세력들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개별 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반독재민주화운동을 각 부문으로 확산하는데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당시 지역사회운동세력들이 정치·인권·노동·농업·교육·성차별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의 일차적 원인이 군사독재정권에 있다는 생각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87년 이전 대전지역에도 다양한 사회운동세력들이 존재했었지만, 민주화라는 우선 과제로 인하여 반독재민주화운동이라는 거대한 운동으로 지역사회운동이 수렴되어 있었다.

대전지역의 종교계열 사회운동은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가톨릭은 정의구현사제단을 중심으로, 개신교는 민중교회 창립(80년)을 계기로 지역민주화운동을 포함하여 여러 진보적 사회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종교는 외부적으로는 군사정권의 탄압으로부터 지역사회운동을 보호하고, 내부적으로 필요한 운동자원과 사회적 신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운동을 지원하거나 직접 참여하였다. 80년대 대전지역의 또 다른 중요한 사회운동세력이었던 학생운동은 1984년 전두환 정권의 학원자율화 조치이후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당시 학생운동세력은 지하 서클 중심의 운동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대중적인 학생운동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노동, 농민, 교육, 여성, 문화 등 다양한 지역사회운동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87년 민주화 이전 가장 급진적인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운동은 80년대 중반 지역대학 학생들의 현장 투신으로 질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독자적인 운동세력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80년대 중반 수도권 공업지역에서는 노동자연대투쟁인 구로동맹파업(85년)이 벌어지고, 서울노동운동연합(85년), 인천지역노동

자연맹(86년) 등과 같은 노동운동단체들이 조직되고 활동했던 것과 비교하면, 당시는 대전지역에서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이 막 태동하던 시점이었다. 부문운동의 성격이 강했던 교육운동, 여성운동, 문화운동 또한 87년 이전부터 형성되고 있었다. 교육운동은 주로 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생문집을 만드는 낮은 수준의 활동이었음도 불구하고, 관련 교사들이 좌천되는 탄압을 받았다. 이후 충청민주교육실천협의회(86년)의 결성(86년)으로까지 발전했지만 군사정권 하에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지역의 진보적 여성운동은 학생운동 출신 여성운동가와 기독교 여성을 중심으로 80년대 중반 하나의 세력으로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87년 이전의 문화운동은 지역대학의 연극반, 노래패, 탈춤반을 중심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문화운동단체인 ‘타’의 결성으로 이어졌다.³⁾

87년 6월 항쟁 이전부터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운동세력이 형성되고 있었지만, 이들의 활동은 군사정권에 막혀 극히 제한적이었다. 군사정권에 막힌 협소한 정치적 기회구조는 지역사회운동세력들에게 각 운동의 독자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운동보다는 각 부문운동을 통해 반독재민주화운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수렴시켰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각 부문운동의 인적 자원들이 지역대학의 학생운동으로부터 충원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운동의 핵심 구성원들은 강한 인적 연결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당시에는 정파운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이라 지역사회운동집단 내부의 이념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8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하여 지역사회운동의 내적 분화가 일부 진행되고 있었지만, 독재정권에 의한 협소한 정치적 기회구조, 운동세력간의 강한 인적 연결망, 그리고 작은 이념적 격차 등은

3) 교육운동, 문화운동 부분은 대전충남 민주화운동사 편차위원회에서 발간 작업 중인 『대전·충남 민주화운동사』(최종보고회용, 2015년 12월 8일)를 참조하였다.

대전지역 사회운동세력들을 민주 대 반민주라는 단일 전선으로 강하게 수렴하게 하는 내외적 조건을 만들었다.

대전지역 6월 항쟁은 전국적으로 전개된 6월 항쟁과 궤적을 같이하면서 진행되었다.⁴⁾ 전두환 정권에 의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87년 1월 14일)과 4·13호헌조치 발표에 대한 지역사회운동의 조직적 저항에서 6월 항쟁이 출발하였다. 즉 이 두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운동세력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민주대연합이 결성되었다. 양쪽의 민주대연합 모두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계열의 민주화운동 단체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표. 2> 참조). 이러한 이유는 기독교 목회자들이 일찍이 지역민주화운동의 핵심운동가로 활동해왔을 뿐만 아니라 운동에 필요한 각종 물적·인적자원의 네트워크로 활용되어왔기 때문이다.⁵⁾

동시에 80년대 중반부터 조직화되기 시작한 충남민주운동청년연합 등과 같이 전문청년운동가들로 구성된 민주화운동단체,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같은 노동운동그룹, 농민운동단체, 교육 및 문화운동단체들도 참여하였다. 즉 80년대 초중반을 경과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세력뿐만 아니라 청년, 교육, 문화, 학생 등 부문운동세력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6월 항쟁의 중심조직인 충남운동본부에는 지역대학생의 적극적인 참여 두드러졌다. 높은 투쟁성과 대규모 대중동원이 가능한 학생들의 참여는 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종교 지도자 중심에서 대중 중심(혹은 대중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냈다.

4) 대전지역 6월 항쟁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지역사회운동사(I)』에 수록된 87년 대전지역 6월 항쟁의 출발과 전개과정(김도균 2015, 119-152)을 참조하였다.

5) 대전지역 6월 항쟁을 이끈 충남운동본부 5명의 공동의장 중에서 재야정치인 1인(송좌빈)을 제외하면 모두 기독교 목회자(김순호 신부, 한영수 목사, 김병제 신부, 이영남 목사)들로 당시 지역민주화운동에서 종교인이 높은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공대위와 충남운동본부의 참여단체

구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공대위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충남운동본부(6월 항쟁)	
	단체이름	개	단체이름	개
가톨릭 계열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농민회충남연합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구현사제단	3	-천주교 대전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 -천주교 대전교구 가톨릭 청년연합회 -가톨릭농민회충남연합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구현사제단	4
개신교 계열	-금강지역 인권선교위원회 -대전기독교청년협의회 -대전지역 인권선교위원회 -천안지역 인권선교위원회 -충남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충남기독교농민회 -충남인권선교협의회	7	-금강지역 인권선교위원회 -대전기독교청년협의회 -대전지역 인권선교위원회 -천안지역 인권선교위원회 -충남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충남기독교농민회 -충남인권선교협의회	7
민중화 운동단체	-충남민주운동청년연합 -충남민주운동협의회 -충남민주화실천가족회 -충청민주교육실천협의회 -놀이패 '얼카뎡이'	5	-충남민주운동청년연합 -충남민주운동협의회 -충남민주화실천가족회 -충청민주교육실천협의회 -문화기획실 '타'	5
학생	-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공주사범대학 총학생회 -대전대 총학생회 -목원대 애학투 -배재대 애학투 -한남대 애학투	6
정치	-		-민주헌정 연구회 충남본부 -신민당충남운동본부	2
합계		15개		24개

출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공대위는 장수찬(2007, 275), 충남운동본부는
충남운동본부발족 선언문(1987년 5월 28일)에서 재구성함

6월 10일, 전국 동시다발 국민대회로 출발한 대전지역 6월 항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6월 시위에 참여했던 심층면접자들은 지역에서 6월 항쟁의 성공한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학생들의 대규모 참여와 그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강조하였다. 특히 6월 15일 대전지역

대학생들이 최초로 교문을 뚫고 대전역까지 대규모 도보행진을 진행하였다. 이 가두시위는 시위에 참여한 학생은 물론 구경하던 시민에게까지 집합적 열광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후 시위대의 규모는 경찰병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시민들은 6월 항쟁기간 동안 시위대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박수와 환호, 성금모금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또 다른 성공 요인으로 충남운동본부라는 지역차원의 민주대연합을 결성할 수 있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당시 민주대연합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거의 모든 사회운동세력들이 참여했었다. 80년대 중반부터 지역사회운동의 내부 분화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군사정권에 막혀 독자적 정체성을 구축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개별 운동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독재민주화라는 공동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연대 조직인 충남운동본부는 지역사회에 민주 대독재라는 단일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6월 항쟁 동안 경찰의 강경진압에 맞서 시위대를 조직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전지역 6월 항쟁은 1960년 4·19혁명, 70년대 반유신운동의 연속선상에서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라는 단일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싸운 지역차원의 거대한 운동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차이의 운동들로: 사회운동의 분화

1) 1차 분화: 정치경제개혁운동, 환경운동 및 여성운동의 출현

대통령 직선제 쟁취로 6월 항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절차적 민주화라는 최소 정의적 민주주의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87년 이후 민중운동과 분화하면서 새롭게 출현한 체제개혁적 사회운동은 권

위주의적 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개혁이 운동의 핵심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80년대 말, 90년대 중반 무렵 새롭게 생성된 경실련 및 참여연대 등의 정치경제개혁 시민운동이 시민으로부터 저항의 권의를 인정받아 급성장할 수 있었다(조대엽 2007, 226). 한국 사회에 반독재 민주화운동 및 민중운동과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을 각인 시킨 단체는 89년 7월에 출범한 경실련이었다. 경실련은 94년 참여연대가 등장하기 전까지 정치경제개혁 시민운동을 주도하였다.

대전경실련은 서울의 중앙 경실련이 출범한 4개월 후인 12월 6일에 빠르게 결성되었다. 하지만 대전경실련은 대전지역 최초의 정치경제 개혁운동단체였음에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시민운동을 전개하기에는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 이러한 결정적 이유는 당시 대전경실련은 중앙 경실련의 창립을 주도했던 서경석 목사, 개인의 학연과 기독교 인맥을 통해 대전지부형태로 급조되었기 때문이다. 즉 지역의 여러 사회운동세력과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밑으로부터의 논의과정 없이 명망가 개인의 사적 인맥을 통해 위로부터 급조되었다. 이로 인해 대전경실련은 지역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획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이슈화할 만한 운동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말았다. 따라서 지역차원의 본격적인 정치경제개혁운동의 출발은 95년 4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의 창립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운동에 오랫동안 관여해 온 한 심층면접자의 구술에 의하면 지역사회운동 내부에서 새로운 시민운동에 대한 요구는 9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6월 항쟁이후 가장 대중적 지역운동이었던 ‘용산 미8군 대전이전반대운동’이 끝난 직후 운동에 참여했던 진보 성향의 종교인 및 지식인, 전문직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올바른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시민모임’(91년, 이하 시민 모임)을 결성하였다.⁶⁾

이 모임은 운동단체라기 보다는 사교모임에 가까웠지만, 지역운동의 명망가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모임의 특성상 대외적으로 뚜렷한 활동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내부적으로 기존의 민중운동 및 통일운동과 구분되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시 지역사회운동의 현실은 92년 14대 대통령 선거를 치루면서 비판적 지지론과 독자후보론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94년 초반, 지역 활동가들이 모여 이념과 정파, 세대, 운동영역을 넘어 지역사회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지역운동의 발전을 생각하는 작은 모임’(이하, 작은 모임)을 결성한다. 작은 모임은 50여 명의 지역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실천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논의를 통해 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95년 6월 27일)에 지역사회운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한다. 이후 시민 모임, 작은 모임 그리고 당시 지역민영방송국 공익성 강화를 위해 활동하던 ‘방송바로세우기 대전시민위원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대전참여연대를 창립(95년 4월)하기에 이른다(김도균 2015). 즉 대전참여연대에는 광범위한 지역사회운동세력들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적 전문가 그룹 및 도시 중산층의 참여로 대전경실련과 다르게 출발단계부터 지역사회운동세력들의 광범위한 동의와 높은 운동역량을 보유할 수 있었다.

조희연(2010, 65-67)은 저항적 자유주의적 운동흐름이 87년 이후 정치적 기회구조가 확장됨에 따라 체제개혁적 사회운동으로 계승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대전참여연대 사례를 보면 자유주의적 저항세력뿐

6) 1989년~90년, 용산 미8군 대전이전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반대운동에는 관변 성향의 단체부터 민중운동단체까지 이념과 계층을 넘어 광범위한 시민적 지지를 받았으며 운동의 결과 또한 성공적이었다. 이 저항운동은 지역문제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지역시민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김도균, 2015).

만 아니라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노동운동 등 급진적 운동세력을 포함하여, 87년 이후 성장한 개혁적이고 진보적 지역사회운동세력 거의 모두가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역사회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운동 자원의 한계 때문에 지역사회운동의 역량을 총 동원해야만 영향력 있는 정치경제개혁 시민운동단체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정치경제개혁운동이 권위주의체제 속에서 형성된 정치권력 및 시장권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급진적 운동세력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대전참여연대는 체제개혁적 운동을 지향하고, 온건하고 평화적인 운동 방식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진적 운동세력뿐만 아니라 개혁자유주의적 운동세력까지 폭넓은 이념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다.⁷⁾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율화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민주제도의 도입이 지역의 정치경제개혁운동을 생성하고 확대할 수 있는 주요한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정치적 조건은 지역사회운동세력들에게 지방의 제도정치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켜주었다. 95년 지방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목적으로 대전참여연대를 창립했을 정도로, 지역사회운동세력은 지방자치를 지역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주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대전지역의 정치경제개혁운동은 지방자치에 대응하려는 지역사회운동세력의 능동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사회운동의 또 다른 주요한 특징은 반독재민주화운동이라는 거대한 운동에 가려 미분화되어 있던 소수자운동의 성장을 들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독자세력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⁸⁾ 대전지역의 진보적 여성운동의 맹아는 87년 이전

7)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 청주)의 전신인 충북시민회(1989년 6월)의 결성에는 지역의 민주화운동세력뿐만 아니라 합리적 보수세력까지 참여하였다(김도균, 2015). 즉 지역의 조건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시민운동단체라고 하더라도 폭넓은 이념적 다양성을 지닐 수 있다.

부터 존재했으며, 87년 6월 항쟁 직후 이러한 흐름이 충남여민회(현 대전여민회)라는 진보적 여성운동단체의 결성(87년 12월)으로 수렴되었다. 당시 대전여민회 결성에는 80년대 초중반부터 지역대학과 대전 YWCA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학생운동 출신 여성뿐만 아니라 대전주부아카데미 출신의 기독교여성, 진보적 여성지식인 등 다양한 계층들이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⁹⁾

활동초기 대전여민회는 여성권인보호 운동에 집중하면서 기존의 민중운동 및 민주화운동과 구분되는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특히 직장과 가정에서 지역여성들이 경험한 성차별,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한편, 전국적 차원에서 전개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90년대 중반부터 활동력이 급격하게 쇠퇴하여 97년에는 대전여민회의 존재 여부를 논의하는 비상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90년대 중반은 대전여민회의 침체와는 반대로 대전참여연대(95년), 환경운동연합(93년), 녹색연합(96년) 등 지역의 주요한 시민운동단체들이 결성되고 활동을 시작한 시점이었다. 역설적이게도 대전지역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던 시점에 오히려 대전여민회는 침체기로 들어섰다.

왜 이런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인가. 87년 6월 항쟁 직후 출범한 대전여민회는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8) 여성운동사 서술에서 보수적(관변적) 대 진보적 여성운동이라는 양분법은 일반적으로 채용되는 방식이다. 87년 이전부터 존재했던 위로부터 조직된 보수적인 여성운동 혹은 직능단체 중심의 여성조직과 구분하기 위하여, 87년 이후 남성에 의한 사회적 독점의 해체를 지향하는 새로운 여성운동의 흐름을 진보적 여성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오유석, 2010:247-248). 그리고 본 논문의 대전지역여성운동(김경희 2015, 168-200) 부분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지역사회운동사(Ⅱ)』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9) 대전주부아카데미는 지역민주화운동의 대표적 인사였던 정지강목사의 주도로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되면서 많은 교육생을 배출했다. 교육 내용은 여성문제, 환경문제 및 먹을거리, 평화와 경제문제까지 다양했으며, 교육생들은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운동, 협동조합운동 등의 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반까지 자주적 민주사회, 통일조국 건설 등과 같은 민족민주운동의 정체성 또한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¹⁰⁾ 즉 93년 문민정부 등장과 95년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도입 이후에 시민운동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출발한 다른 시민운동단체들과 다르게 87년에 결성된 대전여민회는 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관성과 시민운동 사이에서 조직의 비전과 방향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또 다른 주요한 원인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활동가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에 있었다. 초기 훈련되고 교육된 활동가와 핵심 구성원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 등을 이유로 원활하게 조직 활동에 결합할 수 없었다. 여기에 활동가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생계 문제까지 겹치면서 단체의 활동력이 붕괴되어 버린 것이다. 즉 여성운동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과 가정, 여성운동과 생활 사이의 양립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반면 90년대 중반부터 환경운동은 지역시민운동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각되었다.¹¹⁾ 개발과 성장주의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간과되거나 무시되었던 환경, 먹을거리, 안전, 삶의 질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세계 개혁적 운동이 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민중담론 중심의 저항적 반공해운동과 구분되는 대전지역 환경운동은 88년 무공해 농산물 직거래운동인 '살림의 집' 개소로 태동하였다.¹²⁾ 이 농산물 직거래운동에는 대전여민회 창립과정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했던 대전주부아카데미의 중산층 기독교여성들이 중심적

10) 충남여민회의 창립선언문을 보면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하여 남녀 평등한 사회, 자주적 민주사회, 통일조국 건설"을 창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87년 6월 항쟁 직후 결성된 대전여민회는 80년대 변혁적 민족민주운동의 정체성 또한 강하게 지니고 있다.

11) 본 논문의 대전지역환경운동(김종남 2015, 128-167) 부분은 대전발전연구원이 발간한 『지역사회운동사(Ⅱ)』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12) 80년대 반공해운동은 민주화운동을 지향했던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민중운동의 관점에서 공해 피해주민들을 지원하는 형태의 운동을 주력하였다. 반면에 87년 민주화이후 환경운동은 온건하고 현실적이 목표를 지향하며 도시 중산층의 참여가 활발한 시민운동의 전환되었다.

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환경문제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운동세력들에게 운동이슈로 각인된 결정적 계기는 90년에 진행된 금강 제2휴게소 건설반대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금강 휴게소 건설은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금강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지역사회운동세력들은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시민대책위원의 결성과 활동과정에서 대전YMCA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운동세력이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외에도 전문직 종사자 및 중산층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반대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반대운동이 끝난 직후 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기독교단체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환경보전시민연합'을 결성하기에 이른다.¹³⁾ 결성 이후 이 단체는 재활용운동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환경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살림의 집, 금강 제2휴게소 건설 반대운동, 환경보전시민연합의 활동 등은 93년 대전환경운동연합(이하, 대전환경련)의 창립으로 모아지게 된다. 87년 민주화 이후 부산, 대구, 광주, 마산·창원, 울산 등에서는 지역별 공해추방운동연합(이하, 공추련)이 결성되고, 이후 92년 리우환경회 참여를 계기로 지역별 공추련이 다양한 계층의 참여에 기반을 둔 시민형 환경운동(환경운동연합)으로 전환하였다. 대전은 공추련 단계 없이 전국적 전환에 맞춰 바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할 수 있었는데, 이는 87년 이후 지역사회운동 내부에서 환경운동의 자생적인 동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전환경련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또 다른 환경운동단체인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환경련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 조직되었다. 대전

13) 당시 환경보전시민연합에는 대전YMCA, 대전YWCA, 대전주부교실, 기독교연합봉사회, 농촌선교개발원 등의 기독교 단체들이 중심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대전지역 환경운동의 태동과정에서 기독교운동세력이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해준다.

환경련의 태동과정에서 기독교운동세력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면, 대전충남녹색연합의 태동과정에서는 교수 및 연구원 등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91년 지역대학의 환경공학 전공 교수 및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들이 중심이 되어 배달환경연구소를 창립하였다. 초기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 환경문제에 개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운동에 주력하였다. 하지만 이후 핵심 구성원들은 지역에 소재한 연구소만으로 활동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 규모의 환경운동단체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이에 활동 근거지를 대전에서 서울로 이전하고 94년 녹색연합이라는 시민형 환경운동단체로 확대·창립하였다. 즉 녹색연합의 출발이 대전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96년 대전지부형태로 창립되었는데, 배달환경연구소의 교수 및 연구원뿐만 아니라 중산층 여성들도 주축이 되어 참여하였다. 대전환경련 및 대전충남녹색연합 모두에서 전문가 및 중산층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환경운동의 특성상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여성의 삶과 생태적 감수성 사이의 높은 친화성이 환경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즉 환경운동을 통해 전문가와 여성, 그리고 폭 넓게는 80년대 경제성장의 성과로 성장한 탈물질주의 가치지향의 도시 중산층이 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2) 2차 분화

(1) 제도화에 대한 대응과 운동의 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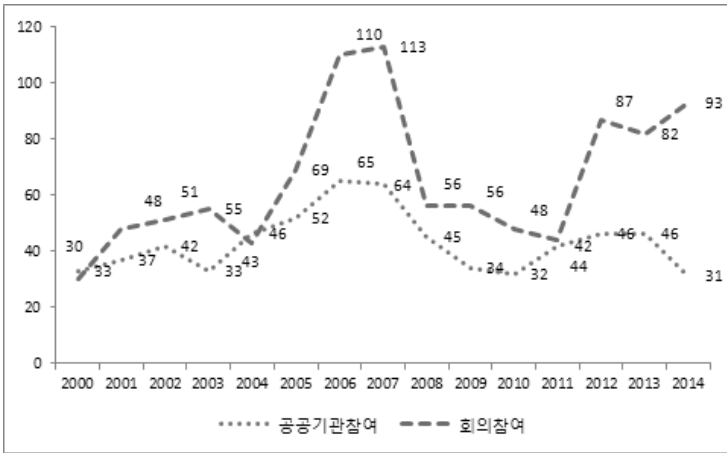
98년 반독재민주화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면서, 한국의 민주화는 사회운동의 요구가 제도정치영역으로 침투하는 제도화 수준으로 나아

갔다. 즉 수동혁명적 민주화 2단계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자율화를 넘어 제도화 수준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조희연, 2010, 81). 90년대 민중운동과 분화되면서 새롭게 출현한 대전참여연대, 대전환경련 및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여민회 등 주요한 시민운동세력은 제도화에 대해 완전한 거부도 완전한 수용도 아닌, 상황에 따라 수용과 거부를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이들은 도시중산층에 기반을 둔 온건하면서도 개혁적인 시민운동을 지향했기 때문에 완전히 거부하는 반제도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없었고, 반대로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적극적인 제도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수용과 거부를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였는데, 이를 다른 개념으로 표현하면 ‘갈등적 협력’관계라고 할 수 있다(Giugni and Passy 1998, 85).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확대로 지역사회운동이 지방의 제도정치영역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장되면서, 지역사회운동세력들은 갈등과 협력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도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대전 지역 대표적인 체제개혁적 시민운동단체인 대전참여연대는 창립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보조금 사업 없이 회비와 후원금에 의존하여 단체를 운영해 왔다. 이는 단체의 재정 자립을 통해 운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강력한 권력감시운동과 지역자치운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독립과는 별개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방의 제도정치영역과의 공식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림. 1>은 지난 14년 동안 대전참여연대가 참여한 공공기관의 위원회와 회의에 참여한 숫자이다. 변화의 궤적을 보면 참여정부(2003~2007년)시기에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이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도균, 2015). 상대적으로 반독재민주화세력이 독자적으로 중앙정부의 권력을 장악한 노무현정부 시절 참여가 더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꿔 말하면 중앙정부가 시민운동

세력에 대해 포용적 전략을 택하는지, 아니면 배제적 전략을 택하는지에 따라 일정부분 지역 수준의 민관협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¹⁴⁾ 하지만 중앙정부가 배제전략을 취한다고해서 협력관계가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방자치가 20년 이상 지속되어 오면서 지방정부의 정치성향 성향과 관계없이 상호 필요에 의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즉 대전참여연대 입장에서 보면 공식적 민관협력은 사회운동의 요구들을 정책화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정부의 정책을 보완함은 물론 정책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그림. 1〉 대전참여연대 공공기관 참여(단위: 건)



출처: 대전참여연대 연도별 정기총회 자료집에서 재구성(김도균, 2015)

지역환경운동 또한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와 강

14)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보수정당 출신의 정치인들이 대전 시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가설을 더욱 뒷받침해 준다.

시기	2002년 7월-2006년 6월	2006년 7월-2010년 6월	2010년 7월-2014년 6월
대전시장(정당)	염홍철(한나라당)	박성호(한나라당)	염홍철(자유선진당)

력하게 대립하였지만, 환경의 질 개선 및 시민안전, 환경의식 향상 등과 같이 갈등적 요소가 덜한 환경이슈에 대해서는 꾸준히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95년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첫 번째 임기동안, 지방정부가 개발 및 성장담론을 앞 세워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환경운동세력과 대립관계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둔산문예공원 월드컵축구장 건설반대운동(96년), 월평공원구간 갑천우안도로 건설반대운동(98년),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저지운동(2000년) 등이 지방자치 초기 지방정부와 지역환경운동간의 대표적 갈등사례다. 이러한 환경갈등은 지방정부에게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갖는 시민지향을 학습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으며 지역환경운동의 입장에서는 환경운동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갈등적 요소가 덜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 대표적 사례로 대전시 생태하천조성사업(2003년)을 들 수 있다. 당시 참여정부가 들어서면 하천개발사업이 생태계 복원이라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시민참여를 강조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 그리고 지방정부 또한 그간의 환경갈등을 경험하면서 민관협력이 더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식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3대 하천 조성계획수립에는 지역환경운동의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완전하지 않지만 이들의 주장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지방정부를 넘어 공기업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 대전충남녹색연합의 시민참여 대기오염 모니터링 활동인 블루스카이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충청지사)와 함께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해 오고 있다.

대전환경련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사안에 따라 정부와 갈등하고 협력하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다면, 99년 창립한 ‘대전충남생명의 숲’은 보다 더 적극적인 제도화 전략을 선택한 숲 보전 전문 환경운동단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 시작한 숲 가꾸기 환경단체 창립은 정부

기관인 산림청의 강력한 지원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대전지역에서도 산림청과 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그리고 대전환경련 등이 참여하여 단체 창립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단체의 운영위원을 보면, 정부(혹은 기업)와 긴장관계를 유지해 온 지역의 다른 환경운동단체와는 다르게 관련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 기업 대표들이 폭 넓게 참여하고 있다. 즉 생명의 숲은 정부와의 직접적 협력을 통해 운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적극적 제도화 전략을 선택하였다.

체제개혁적 운동단체인 대전참여연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환경운동이 제도화에 대해 더 수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90년대 후반에는 대전충남생명의 숲처럼 적극적 제도화 전략을 취하는 환경운동단체까지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환경운동단체와 대전참여연대 모두 조직 자체의 분화과정 없이 근 20년간을 단일한 단체로 유지·활동해 오고 있다. 반면에 진보적 여성운동은 대전여민회를 모(母)단체로 하여 조직 내부의 분화과정 없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대전의 진보적 여성운동을 대표하던 대전여민회는 90년대 중반 조직 해체라는 위기 상황까지 몰렸지만, 97년 비상총회를 계기로 조직재건을 시도한다. 그간 남아있던 민족민주운동의 정체성을 탈각하고 보다 여성주의에 기반을 둔 대중적 시민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그리고 30대 중산층 여성들이 회원으로 새롭게 충원하면서 새로운 지도력을 형성하고 재정안정화를 꾀하였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대전여민회는 각종 여성 상담소 운영을 통해 지역여성문제에 개입하는 동시에 마을에 기반을 둔 풀뿌리운동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여성운동의 기반을 다져나가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전지역 여성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된 여성운동과 긴밀하게 맞물려 진행되었다. 90년대는 80년대부터 진행된 반성폭력운동의 법적·제도적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2001년 여성부 출범으로 이전과는 비

교할 수 없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¹⁵⁾ 여성부의 출범은 정부의 제도영역 내에 여성운동의 동맹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여성운동은 제도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각종 여성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상담소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대전여민회 또한 97년 IMF경제위기 직후 대전실업여성극복지원센터(97년), 여성노동센터(99년)를 열어 실직여성가장 및 여성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성(性)과 가정폭력 관련 상담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가족성 상담교육센터(98년), 성매매 여성의 의료 및 법률, 자활을 지원하는 성매매 여성지원상담소(2003년)도 운영하였다.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상담소는 당시 여성운동이 이전보다 적극적인 제도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98년 국민의 정부이후 국가와 사회운동 사이의 변화된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간의 제도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전지역 여성운동은 직접적인 지방의회진출로까지 확장되었다. 2002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대전여민회 이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당시 지방선거운동 과정에 대전의 진보적 여성운동세력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였다. 하지만 2006년에 두 명의 여성후보가 출마하였지만 당선에는 실패하였다. 이러한 지방선거에 대한 경험, 그리고 당시 반독재민주화세력(노무현 정부)이 독자적으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사회운동가들이 제도정치영역으로 활발하게 진출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된 정치적 조건 속에서 대전여민회는 조직분화를 통해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2007)라는 전문 여성정치운동단체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대전여민회의 평

15) 94년 성폭력특별법제정, 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99년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에 직장내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의무조항이 신설되면서, 80년대부터 여성운동의 주요한 숙연 사업이었던 반성폭력운동의 법적·제도적 성과들이 만들어졌다.

화통일위원회가 분화하여 평화운동 전문단체인 대전평화여성회(2007년)라는 독립 조직으로 분화하였다. 이 외에도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는 ‘여성인권티움’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풀뿌리 센터는 ‘풀뿌리 여성마을숲’으로 분화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복지관의 여성장애인 자조모임을 기반으로 2006년 ‘대전여성장애인연대’가 출범하였다. 대전여민회에서 분화된 진보적 여성운동단체와 새롭게 생성된 대전여성장애인단체를 묶어 2012년 대전여성단체연합을 창립하기에 이른다. 대전참여연대, 대전환경련 및 대전충남녹연합 등은 조직의 분화과정 없이 단일 단체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반면에 지역여성운동은 대전여민회를 모(母)단체로 하여 여러 여성운동단체로 분화하였다. 이는 대전참여연대와 환경운동단체들이 다양한 운동이슈를 조직의 운동영역으로 포섭하는 종합적 시민운동을 지향해 왔다면, 지역의 진보적 여성운동은 운동의 전문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2) 새로운 시민운동의 생성: 지역화폐운동, 협동조합운동 및 풀뿌리 마을공동체운동의 출현

이 시기 사회운동의 또 다른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대응으로 생활세계 개혁적 운동이 다양화되고, 체제이탈적 성향을 지닌 대안생활세계운동이 출현한 것이다(조희연 2010, 112-113). 하지만 조희연(2010, 100)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듯이 생활세계 개혁적 운동과 대안생활세계운동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들은 오히려 정태석(2015)의 표현대로 지역먹거리운동, 생활공동체운동, 협동조합운동, 공유경제운동 등 다양한 내부지향적 사회운동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대전지역의 내부지향적 운동은 대안경제운동인 한발레츠, 민들레의료생협과 한살림으로 대표되는 생활협동조합운동, 그리고 마을에 기반을 두고 주민신뢰와 호혜성을 강조하는 풀뿌리 마을공동체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다.¹⁶⁾ 지역화폐운동은 한정된 지역사회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를 통해 지역경제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일종의 대안경제운동이다. 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경제운동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0년 한발레츠라는 대전의 지역화폐운동단체가 결성되었다(김성훈, 2005). 한발레츠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가 만든 지역화폐를 매개로 노동과 물품의 교환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체제이탈적 운동의 성향을 보인다.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운동이 한국경제가 IMF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활동이 침체된 것과는 다르게, 한발레츠는 운동의 영역을 확장하여 대전지역 의료생활협동조합인 민들레의료원의 창립(2002년)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의료생협을 통해 사회적 이윤 중심의 의료가 아닌 공공성과 시민참여에 바탕을 둔 대안적 지역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한발레츠와 의료생협의 설립과 초기 안정화에 있어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했다는 것이다. 초기 한발레츠의 지역화폐는 한발레츠에 참여하고 있던 의사들을 통해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그 진료 과정에서 쌓인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의료생협이라는 대안적 의료시스템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의료생협의 설립으로 한발레츠와 의료생협 사이의 선순환적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발레츠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의료생협에서 활발히 유통될 수 있었고, 의료생협은 한발레츠를 통해서 사회적 신뢰와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의료생협과 한

16) 본 논문의 민들레의료협동조합 및 한살림 등의 생활협동조합운동(이정림 2015, 210-230) 부분은 대전발전연구원이 발간한『지역사회운동사Ⅱ』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발레츠 모두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생명사상에 근거한 농산물 도농직거래운동인 한살림운동이 출발 한 것은 86년 이지만, 대전지역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90년대 후반 부터이다. 97년 한살림청주(충북) 분점으로 한살림 매장이 대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청주 협동조합운동은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원주(강원)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90년부터 한살림청주 지부를 창립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해 왔다. 97년 대전매장이 개장한 이후 대전의 한살림 소비자 회원들을 중심으로 독립지부에 대한 필요성이 밑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99년 창립준비 모임을 결성하고 대전과 인근 지역의 소비자와 생산자를 조직하여 2001년 한살림대전을 창립하기에 이른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까지 지역차원의 한살림운동은 농민운동 혹은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대전지역 한살림 운동은 안전한 먹을거리 소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소비자 회원들이 주도한 측면이 강하다. 즉 대전 한살림운동은 시장과 소비가 새로운 사회운동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살림대전은 공업사회의 생산과 공장의 연대와는 다른 소비사회의 소비와 시장의 연대에 기초하였다(정태석, 2009). 소비자 중심의 창립은 한살림대전을 짧은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지역사회에 정착시키는 결정적 이유였다. 특히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고학력·중산층 소비자 집단이 한살림대전의 성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지역사회에서 웰빙(well-being), 삶의 질과 탈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학력·중산층 집단이 확장되면서 환경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초기 대전지역 풀뿌리운동은 90년대 후반 지역의 진보적 여성운동 단체인 대전여민회로부터 출발하였다. 90년대 중반 해체위기를 넘긴

대전여민회는 그간 사무국 혹은 활동가 중심 운동에 대한 반성으로 조직 내부에 풀뿌리센터를 신설하고, 풀뿌리운동을 새로운 운동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다. 98년 대전의 신도심인 둔산동(서구) 아파트공동체운동을 시작으로, 2001년 대전여민회 사무실이 위치한 중촌동(중구)을 중심으로 풀뿌리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마을의 작은 공원에서 진행한 나눔 장터와 어린이 벼룩시장은 주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행사를 지켜본 마을 건물주의 무료임대료 재할용 나눔 가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또한 방학 동안에는 어린이방학캠프와 연극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여기에 참여한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소모임을 결성하였다. 이후 이 소모임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풀뿌리 마을공동체운동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리더십과 활동역량은 이후 2007년 마을어린이도서관 건립운동으로 수렴되었다.

마을어린이도서관은 단순히 마을어린이들의 학습과 놀이공간을 넘어 마을여성들의 사회적 인식과 실천을 확장하는 풀뿌리운동의 허브역할을 수행하였다. 마을도서관 운영을 통해 성장한 여성 리더십은 생활세계 지향적 운동을 더욱 확장해 나갔다. 마을카페 열어 공정무역커피 및 수공품 판매를 통해 마을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1년 ‘보리와 밀’이라는 마을기업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마을여성들은 마을기업을 통해 이웃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은 물론 마을의 영세 자영업자보호에도 앞장섰다. 대전여민회의 풀뿌리운동은 벼룩시장에서 마을도서관으로, 그리고 마을기업으로까지 확장해 오면서 시민사회 내적인 생활관계의 민주적 발전과 호혜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대전지역 풀뿌리운동의 대표적 사례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마을어린이도서관운동을 들 수 있다. 개별 사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마을도서관운동은 시장주의와 사회적 양극화

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해보고자 하는 일종의 대안교육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2005년 대전지역 최초의 마을어린이도서관인 ‘알짹마을 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한 이후 현재 총 15개의 마을어린이도서관이 지역 사회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알짹마을 어린이도서관 사례를 보면,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부의 격차를 재생산하는 현실을 비시장적 공동체운동으로 극복’해보고자하는 대안교육 주민운동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도서관 운영을 통해 습득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방과후 마을학교의 설립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다른 마을어린이도서관운동 또한 이와 유사한 발전경로를 보여준다. 즉 초기 사교육 시장에서 벗어나 대안교육을 목적으로 어린이도서관운동이 추진되었고, 이후 도서관운동을 바탕으로 마을카페, 마을신문, 마을기업 등의 다양한 공동체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또 다른 주요한 형태의 풀뿌리운동은 인터넷 커뮤니티(카페)가 오프라인 마을공동체운동으로 전환을 한 경우다. 앞서 살펴본 마을어린이도서관운동은 사무국 혹은 활동가 중심의 운동에 대한 반성으로 풀뿌리운동을 강화하려는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연대 등 전문시민운동단체와 지역주민간의 협력관계 속에서 진행된 측면이 있다. 반면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마을공동체운동은 주민 주도의 성향을 더 강하게 지닌다. 이러한 대표 사례 중 하나가 ‘관저품앗이공동체’라는 마을공동체운동이다. 이 풀뿌리 마을공동체운동은 2004년 새롭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주해 온 젊은 주부들이 육아와 생활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개설한 ‘관저아줌마카페’(Daum)라는 온라인 카페에서 출발하였다(김도균·정선기, 2014). 온라인 커뮤니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수평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다. 즉 진입장벽이 낮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과 젊은 주부들의 필요가 맞아

떨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었고, 이는 회원들 간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모임으로 확장되었다. 이후 변화를 거듭해 오면서 이웃간 신뢰와 상부상조, 나눔과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마을기업과 마을신문으로까지 성장하였다.

풀뿌리 마을공동체운동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지원에 의해서도 활성화된 측면이 있다. 80년대 도시공동체운동은 주로 도시빈민운동을 중심으로 국가권력과 날카로운 대립관계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90년대 민주화와 지방화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도시중산층으로까지 운동이 확장되면서, 운동의 내용 또한 생활밀착형으로 다양화 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를 지나면서 민관협력 도시공동체운동으로까지 발전하였다(정규호, 2012). 이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도시문제 해결의 효과적 정책의 하나로 마을공동체운동을 받아들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전의 풀뿌리 마을공동체운동이 지역시민사회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활동의 지속성과 활동영역을 확장하는데 있어 지방정부의 지원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 마을공동체운동은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생활세계 지향적 운동이다. 즉 지방자치 하에서 마을공동체운동과 지방정부가 대립관계에 놓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운동의 주체들은 지방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5. 논의 및 결론

대전지역 87년 6월 항쟁은 1960년 4·19혁명이후 이어져온 지역차원

의 반독재민주화운동, 즉 거대한 운동의 종결이라고 할 수 있다. 6월 항쟁 이후에야 대전지역에서도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1차 분화가 이루어졌고, 이후 지속해서 2차 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공존하는 차이의 운동들로 지역사회운동의 지형도가 재구조화되었다. 90년대 중반 지역노동운동은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라는 단일 조직으로 수렴되었으며, 지역시민운동은 정치경제개혁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풀뿌리운동, 대안사회운동, 협동조합운동, 기타 전문시민운동 등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되어왔다. 즉 한국 사회운동이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분화되어왔다는 선행연구들의 핵심적 논리는 대전지역 사회운동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본 연구와 같은 경험적 연구에 의해 새롭게 확인되고 수정·보완해야 하는 부분들 또한 존재한다.

먼저 조희연을 중심으로 한 거시적 차원의 연구들은 90년대 들어 새롭게 도입되고 확대된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정치구조를 사회운동의 외부변수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화 과정을 중앙정치권력의 변화과정으로 협소하게 설정한 후, 중앙정치권력과 사회운동 사이의 조응관계 속에서 사회운동의 성장과 분화과정을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 되었듯이,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확대가 지역사회운동의 생성과 확장을 자극하는 직접적인 정치적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라는 새로운 정치구조는 지역사회운동의 변화를 자극하는 동시에 사회운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지방자치의 확대는 지역사회운동세력이 지역시민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지방의 제도정치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증대시켜 주었다. 90년대 들어 생성된 정치경제개혁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은 물론 2000년대에 들어 지역시민운동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대안사

회운동과 풀뿌리운동들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를 개혁적·진보적·민주적·합리적·호혜적으로 재구조화하려는 지역사회운동세력들의 진화과정이라고 볼 있다.

지방자치 하에서 지역시민운동세력과 지방정부가 서로를 전략적 파트너로 수용하도록 하는 정치적 조건이 만들어졌다. 지역시민운동세력은 지방정부의 제도적 통로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운동적 요구들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시민운동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 및 사안에 따라 지방정부와 때론 갈등하고 협력하는 제도화 전략(병행전략)이 효율적인 운동방식이었다. 그러나 제도화 전략이 지역시민운동세력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선택 된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 실행 초기, 지방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은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을 유발하였고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졌다. 이에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역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를 필요로 했다. 즉 제도화 전략은 지역시민운동세력과 지방정부 사이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전국적 차원에서 보수적 중앙정부와 진보적 시민운동 사이의 불편한 관계에서도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이 꾸준히 유지되어 온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들은 사회운동세력들의 능동적인 자기 선택의 과정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사회운동은 사회구조에 대한 즉자적 대응물이 아니다. 사회운동은 자원동원의 가능성과 정도에 따라 운동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동적 주체라는 것이다. 조희연의 주장에 따르면 87년 이후 자율화가 확대됨에 따라 저항적 자유주의적 세력이 체제개혁적 운동으로 계승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대전참여연대 사례를 놓고 볼 때 이는 일부의 사실에 불과하다. 대전참여연대의 창립 과정에는 지역의 자유주의적 세력뿐만 아니라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

노동운동의 급진적 운동세력까지 참여하였다. 대전참여연대와 같은 정치경제개혁운동은 권위주의체제 속에서 형성된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개혁의 목표로 했기 때문에 급진적 사회운동세력들에게도 충분한 호소력이 있었다. 또한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함께 경험했던 초창기 지역시민운동의 핵심 구성원들의 강한 인적 연결망은 이념과 운동영역을 넘어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 냈다. 따라서 대전참여연대는 체제개혁과 온건한 운동방식을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진적 운동세력에서 개혁자유주의적 운동세력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이념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다. 만일 이러한 폭 넓은 자원동원이 불가능했다면 대전의 정치경제개혁운동이 출현하고 활동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는 명망가 개인의 인맥에 기초하여 만들어져 활동력이 약했던 대전경실련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의 자원동원 방식은 대전참여연대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 두 운동영역은 대전참여연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기독교 사회운동, 여성, 전문가 및 도시의 신중간계급에 더 의존하는 동원구조를 보였다. 특히 8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과정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기독교 사회운동은 대전지역 여성운동과 환경운동 태동과정에서도 주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진보적 여성운동단체인 대전여민회의의 핵심 활동가였던 학생운동 출신 여성운동가들은 80년대 중반 대전YWCA의 활동을 통해 여성운동의 경험을 축적했다. 그리고 대전YMCA를 중심으로 구성된 환경보전시민연대회의는 대전환경련 창립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전지역 Y계열단체는 탈정치화한 중간지대의 운동이 아니라 8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정치화되었다. 안정적 조직과 재정, 그리고 막대한 규모의 회원을 바탕으로 한 Y계열 단체의 지원은 새로운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이 출현하는데 필요한 운동자원을 제공해 주었다. 대전여민회 및 대전환

경련에도 관련 전문가와 화이트칼라 계층들이 주요한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지만, 대전충남녹색연합의 경우에는 지역대학과 대덕연구단지
의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을 통해 여성과 전문가, 신중간계급이 지역시
민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였다.

반면에 전문 활동가(혹은 사무국) 중심의 전문시민운동이 아닌 생활
협동조합 및 풀뿌리운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존의 전문시민운동
과 거리를 두고 있던 전문가와 중산층 가정의 여성들이 참여가 활발
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응하는 특성이 강한 지역화폐운동
과 의료생협운동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전문직종인 의
사들의 참여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역의 대표적인 로컬푸드
운동인 한살림대전은 중산층 가정의 여성소비자들이 창립과 활동을
주도했다는 측면에서 환경운동 혹은 농민운동으로 출발한 다른 지역
의 한살림운동과 차별성을 지닌다. 안전한 음식에 대한 높은 요구와
일정한 소득수준을 지닌 중산층 가정에 기반을 둔 한살림대전은 짧은
기간 안에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대전의 대표적 풀뿌리
운동인 마을어린이도서관 운동과 온라인 커뮤니티가 오프라인 마을공
동체 운동으로 확장된 경우에서도 전문시민운동과 거리를 두고 있던
풀뿌리 주민들이 운동의 주체로 성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필자는 거시적 관점의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
던 지방자치가 한국 사회운동의 성장과 분화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
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운동의 성장과 분화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즉자적 반응이 아니라, 민주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폭 넓은 자원동원에 기반을 둔 사회운동세력들의 능동적인
자기 선택의 과정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반독재민주화운동 시절에는
운동의 인적 자원이 학생운동 출신 운동가와 기독교 목회자들로 단순

하였다. 이러한 단순한 인적 구성원은 구성원간의 높은 신뢰와 헌신을 유도할 수 있지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 동원의 측면에서 보면 불리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인적 자원들이 87년 이후 시민운동의 출현과정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하더라도 이들만으로는 필요한 수준의 자원동원이 불가능하다. 즉 민주화 이후 외부의 물리적 탄압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여성, 전문가 및 화이트칼라로 대변되는 신중간계층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면서 자원동원의 가능성과 폭이 크게 증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동원의 확대가 새로운 운동의 출현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3월 31일 접수, 4월 25일 심사완료, 5월 16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권태환·송호근. 1997. 『신사회운동의 사회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경희. 2015. “대전지역 여성운동의 어제와 오늘.” 박노동·김도균·김덕진·김중남·김경희·이정림·한상헌·이기동. 『지역사회운동사Ⅱ』 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163-197.
- 김도균. 2013. “지역환경운동의 형성과 도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17(1). 121-161.
- _____. 정선기. 2014.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과 지역의 사회자본 확장: 대전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1):281-306.
- _____. 2015. “87년 민주화 이후 충청지역시민운동의 제도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2). 151-180.
- _____. 2015. “87년 대전지역 6월 항쟁의 출발과 전개과정.” 박노동·허종·김도균·김덕진·한상헌. 『지역사회운동사 I』 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197-152.
- _____. 2016. “충청지역 시민운동의 역량: 시민행동지수(CAI)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0(1). 191-245.
- 김성훈. 2003.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병원: 대전민들레의료생협.” 『국토정보(5월)』. 116-121.
- 김정훈. 2010a. “민주화 과정에서의 사회운동의 분화와 변화에 대한 연구: 풀뿌리사회운동과 사이버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조희연·김동춘·김정훈 편. 『거대한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한국 민주화와 분화하는 사회운동들』. 서울: 한울출판사. 217-244.
- _____. 2010b. “민주화 20년의 시민운동: 시민운동은 여전히 민주화의 동력인가.” 김정훈. 『87년 체제를 넘어서』. 서울: 한울출판사. 447-470.
- 김중남. 2015. “환경운동의 형성과 발전.” 박노동·김도균·김덕진·김중남·김경희·이정림·한상헌·이기동. 『지역사회운동사Ⅱ』 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123-160.
- 박노영·민병기·김도균·이정림·이상용. 2011. 『대전지역민주노조운동사』. 서울:

한울출판사.

- 박노동·허종·김도균·김덕진·한상현. 2015. 『지역사회운동사Ⅰ』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박노동·김도균·김덕진·김중남·김경희·이정림·한상현·이기동. 2015. 『지역사회운동사Ⅱ』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박찬표. 2013. “법치 민주주의 대 정치적 민주주의.” 최장집·박찬표·박상훈 편. 『어떤 민주주의인가』. 서울:후마니타스.
- 오유석. 2009. “민주화 이후 사회적 독점의 재편: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를 중심으로.” 김동춘·조희연·오유석 편. 『한국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 서울: 한울출판사. 165-203.
- _____. 김은희. 2010. “여성운동의 변화와 분화: 여성정치세력화를 중심으로.” 『거대한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한국 민주화와 분화하는 사회운동들』. 서울: 한울출판사. 245-288.
- 이정림. 2015. “대전지역 사회적경제 운동의 형성과 전개과정.” 박노동·김도균·김덕진·김중남·김경희·이정림·한상현·이기동. 『지역사회운동사Ⅱ』 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236.
- 장수찬. 2007. “대전·충남지역의 6월 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6월 항쟁을 기록하다(4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74-299.
- 정규호. 2012.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3(2). 104-125.
- 정태석. 2008.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유럽과 한국의 유사성과 차이: 유럽의 신사회운동과 한국의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겨울호(72). 126-147.
- _____. 2009.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에서 사회구조적 변화 읽기: 불안의 연대, 위험사회, 시장의 정치.” 『경제와 사회』. 봄호(81). 251-272
- _____. 2015. “분산하는 사회운동과 집합의 정치: 사회적인 것과 민주주의.” 『경제와 사회』. 봄호(105). 37-62.
- 조대엽. 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 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서울: 아르케

- 조희연. 2010. “거대한 운동으로의 수렴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분화: 한국민주화 과정에서의 사회운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 조희연·김동춘·김정훈 편.『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한국 민주화와 분화하는 사회운동들』. 서울: 한울출판사. 25-137.
- 하승우, 2006. “플뿌리공론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Meyer, D and S, Tarrow, 1998. “A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Meyer, D and S, Tarrow (eds). The Social Movement Societ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28.
- Giuni and Passy. 1998. “Contentions Politics in Complex Societies: New Social Movements Between Conflict and Cooperation.” Giugni, M., McAdam, D., and C. Tilly (eds) From Contention to Democrac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81-107.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1360-1380.

The Growth and Diversification of Daejeon Social
Movement: From big movement to many movement in
difference

Kim Do-kyun

The growth and diversification process of social movements in Daejeon showed conventional track records and similar paths of Korean social movements. Various social movement powers, religious, student, educational, cultural and youth, had existed before 1987, but they were converged as a big movement called "anti-despotic pro-democracy movement." Each movement chose a strategy to expand anti-despotic pro-democracy movements through each sector, rather than to strengthen its own identity. It was only after the strife in June, 1987 when the first differentiation between labor movements and civil movements took place. And, it continued to the second differentiation when the topography of community movements was restructured "from a big movement to many movements with differences." In the growth and differentiation of community movements, a new political system called local self-government,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the '90s and expanded, had an important influence. This new political structure generated by a local government and local civil movements stimulated the birth and expansion of community movements. It can be said that facing the age of local self-government, not only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 movement, women's movements and environment movements that newly arose in the '90s but also alternative society movement and grassroots movements that newly emerged in the 2000s

were to restructure a local community in progressive, democratic, rational and mutually beneficial manners, or it was a process of active self-evolution of community movements.

Keyword : Social movement, Civil movement, Democracy movement, Diversification of social movement, Local self-governmen.